

새로운 政治學을 위한 모색

— 새로운 敎養敎材 개발 ② —

孫 浩 哲

(全南大 政治外交學科)

새로운 敎養敎材 개발

1. 學問의 主體性 확립과 土着化의 과제
2. 새로운 政治學을 위한 모색
3. 韓國史
4. 社會學
5. 哲學
6. 女性學

1. 問題提起 : 왜 대체 교과과정, 대체 교과서인가?

대학의 본질이 眞理探究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진리의 탐구란 소수의 哲人王이나 大家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페러다임의 치열한 경쟁, 즉 '意見의 다원주의' 내지 '理論의 다원주의'에 입각한 辨證法的 過程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폭 넓은 다양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진리탐구, 특히 그것을 주 임무로 하는 대학의 기본 전제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해방 8년사, 특히 한국전쟁으로 최중

봉인된 分斷體制는 현대 세계에서 유례없이 혐이화된 이데올로기 지형을 우리 사회에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로 지난 40년간 한국의 社會科學은 '반쪽 불구화'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계급'이라는 단어까지도 학술적 용어로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자본론」과 같은 古典들까지도 그 '소지'와 '독서'가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야만성이 우리 학제를 지배해 왔다. 특히 국가권력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政治學의 경우, 그 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과학 내에서도 다른 인접학문 분야에 비해 이같은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편협성 이외에도 문제가 되어 온 것은 학문의 지나친 對外從屬性, 특히 그 '수입선'으로서의 美國에 대한 편중성을 들 수 있다. 학문의 속성상 본질적으로 '존재 구속적'일 수밖에 없는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에 있어서 이같은 대외종속성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現實的 適宜性이라는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을 뿐 아니라, 서구 '중심부'의 논리

를 그대로 답습하는 학문의 反민중적이고 非자주적인 측면까지도 노정시켜 왔다. 특히 지나친 대미의존성은 서구 사회과학 내에서도 科學主義라는 이름 하의 실증주의적이고 물가치적인 학문 풍토를 만연시킴으로써 정치학의 脫政治化를 초래하여 왔다.

다만 1980년대 들어 폭발된 民主化 열망과 민중 부문의 성장과 함께 폐러다임 내지 시각의 다원화, 특히 보다 민주적·민중적·민중적인 사회과학을 향한 시각의 민주·민중·민중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의 경우 앞에서 지적한 학문적 보수성과 이와 연관있는 '진보적' 연구자들의 상대적인 부족 등으로 인해 이같은 視角의 多元化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저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그나마 어렵게 축적된 연구의 성과들이 페레스트로이카의 충격과 이에 따른 국내 정세의 極保守化에 따라 반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의 파국이야말로 역으로 이같은 시각의 다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옹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현존 사회주의의 파국은 이같은 의견의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黨이 진리를 독점하는 '당=無오류주의'에 빠져 체제의 자기정정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그간 진보적 소장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새로운 정치학'을 위한 대체 교과과정 및 대체 교과서 개발의 현황을 그 대표적 연구모임인 한국정치연구회(회장: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성과를 중심으로 개관하는 한편, 현재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같은 움직임이 앞으로 지향해 나아가 할 방향을 원칙적 수준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대체 교과과정의 開發

어떠한 학문이나 교육에 있어서건 어떻게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앞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이다. 따라서 대체 교과서 문제에 선행하여 대체 교과과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의 政治學 敎科課程은 대학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교과과정을 기계적으로 도입한 느낌이 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교과과정은 미국의 교과과정을 모방하여 정치사상사·비교정치·한국정치·국제정치 등의 주요 전공분야로 나뉘어지고 이같은 전공분야가 주요 주제별 과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比較政治 분야이다. "비교없이 지식은 없다"는 주장이 잘 표현해 주듯이 비교는 과학적 지식 획득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며 과거의 많은 정치학연구, 특히 1국 연구들이 과학적 방법론이 결여된 서술적 연구에 머물러 왔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제기된 비교정치 '운동'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같은 비교정치학의 등장도 고립주의적이었던 미국의 헤게모니 국가화에 따라 비서구사회의 지배·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비교를 통한 과학적 지식의 획득이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비교가 과학적 지식획득의 주요 방법이 되 그 전부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겠다(미국 정치학계의 경우도 이같은 이유 때문에 '70년대 이후 비교정치가 하나의 전공분야인가, 과학적 정치학을 위한 하나의 운동인가 아니면 단순한 하나의 방법론인가 하는 논쟁이 활발히 제기되었고 비교정치학의 정체성 위기론이 대두되어 왔다). 보다 세분하여 문제를 분석해 보자면, 비교정치학의 주요 교과목인 '정치발전론', '정치변동론', '제3세계정치'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중 정치발전론은 '60년대 제3세계 발전주의에 영향을 받아 주로 제3세계에 관련된 정치발전을 다루는 과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발전론의 낙관론이 '60년대말 제3세계 전반의 권위주의화의 결과로 파국을 겪으면서 헌팅턴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The Change to Changes (정치변동론으로의 변화)」라는 글에서 가치 함축적인 '정치발전론'으로부터 가치 중립적인 '정치변동론'으로의 전환을 촉구함으로써 '정치변동론'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두 과목 간의 관계는 애매한 것으로 남아 있어 과목 담당교수에 의해 자의적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제3 세계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함께 ‘제3 세계정치’가 신설되었으나 ‘정치발전론’이 사실상 제3 세계의 정치발전 문제를 주로 다루므로써 그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거의 모든 교과목이 앞에서 지적한 정치학 일반의 극보수적인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반영하여 그 내용면에서 ‘반쪽 불구화’된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전공분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自國政治에 대한 교육의 비중이 매우 높은 다른 나라들의 정치학 교육과는 달리 한국 정치가 전체 교과과정 속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非主體性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보적 소장 정치학자들과 연구자들의 연구모임인 한국정치연구회는 그동안 교과과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체교과과정 개발작업을 해왔으나, 아직도 자체 역량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교과서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상태이다. 다만 그동안 논의된 중간 결과를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전공분야의 경우 정치사상사·한국정치·국제관계론 등 기존의 전공분야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比較政治의 경우 그 문제의식(과학적 방법론과 이론으로의 지향)을 살리되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그릇인 정치이론으로 명칭과 내용을 발전시키고 비교정치학의 한 구성 부분이었던 지역연구를 독립시킨다는 것이다. 또 北韓政治의 경우 지역연구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분단고착성 문제 설정이므로 그 중요성들을 감안하여 독립된 전공분야로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정치가 남한정치를 넘어서 북한정치까지 포함하는 분단극복적이고 전 반도적인 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파도기적 교과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정치현상과 경제현상이 갖는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고 그간의 학문을 미분화시켜 온 主流 사회과학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政治經濟學을 독립된 전공분야로 설정하여 정치사상사·정치이론·한국정치·북한정치·지역정치·국제관계론·정치경제학 등 7개의 전공분야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試論的 結論에

도달했고 이같은 분야선정에 기초하여 자체연구 분과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專攻分野의 내용들도 그간의 연구·교육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비주체적이며 지배논리적이었다는 점을 교정하기 위해 보다 민족적·민중적·민주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한국정치의 경시 등을 교정하기 위해 각 분야별 비중을 재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들을 몇 가지 전공분야별로 보면, 정치이론의 경우 비교정치이론 등에서 다루어져 온 서구식 주류 정치이론과 방법론 이외에도 역사유물론·사회구성체론·토대 및 상부구조론·국가론 등 진보적 정치이론들을 보강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地域研究의 경우에도 그간의 미국정치, 일본정치와 같은 단순한 국가별 연구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그 내적 다이나믹 등에 차이가 있는 선진 자본주의 지역연구·현존 사회주의 지역연구·제3 세계 지역연구 등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국가별 연구로 세분화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지역연구가 서술적 연구로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주의정치경제학·자본주의국가론·사회주의정치경제학·사회주의정치이론 등의 이론적 학습과 有機的 聯關을 갖도록 강조한다는 것이다. 국제관계론 역시 리얼리즘 등 서구식 주류 국제관계론 이외에도 진보적 국제관계론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균형을 꾀하고, 현실국제관계연구도 선진 자본주의권 내의 국제관계·사회주의권 내의 국제관계·제3 세계-선진자본주의 간의 국제관계·진영 간(자본주의-사회주의진영)의 국제관계 등 보다 분석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 교과과정의 개발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이처럼 극히 원칙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포괄적인 청사진은 아직 미완성의 작업으로 남아있다.

3. 대체 교과서 開發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정치학의 연구·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 다음으로 중요하게 부상되는 것은 구성된 교과과정을 무엇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教科書에 관한 문제이다. 아무리 교과과정 자체가 이상적으로 짜여져 있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면에서 채워줄 수 있는 교과서가 없으면 교과과정은 사상누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과과정을 外化·物質化시켜 보여주는 대체 교과서 개발 문제는 보다 민주적·민족적·민중적인 ‘새로운 정치학’의 확립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논리적 순서로 볼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과과정이 확정되어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과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교과과정 문제는 해당 학문전체에 대한 包括的·總體的 評價와 청사진이 있어야 가능한 반면, 교과서의 경우 일단 해당 분야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청사진만 세워지면 가능한 분야에서 部分的·段階的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대체 교과서 개발은 대체 교과과정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진척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정치학 교과서들은 대부분 앞에서 지적한 정치학 일반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극히 편협하게 보수적이며 서구이론의 부분별한 수용에 따라 비주체적이며 관념논리의 경향까지 강하게 띠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특히 '80년대 이후 급속하게 변화한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이데올로기적 지형의 변화와 확대, 민중부문의 성장, 계급·계층적 갈등의 심화 등)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수요가 사회 전반과 대학가에서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한국정치연구회는 ‘우리 손으로 쓴 우리의 정치학 교과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1차 작업으로 공동연구를 거쳐 총 4권으로 구성된 정치학강좌 시리즈를 출간하였다. 「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한국정치사」·「한국정치론」·「북한정치론」 등으로 구성된 이 대체 교과서 시리즈는 '88년초 기획에 들어가 40여 명의 연구자들이 각 주제별로 세미나와 길게는 약 1년 반 동안의 공동연구를 거쳐 '89년 1월~'90년 3월 사이에 공동연구 결과물로서 출간되었다. 이 정치학강좌 시리즈는 그 出刊辭가 밝혀주듯이 “정치학은 민족의 政治現實에 성실하게 답변할 임무를 갖

고 민족의 政治的 展望을 정확하게 추구하는 定向을 새워야 한다”는 전제 아래 ‘민족적·민주적·민중적인 정치학’을 그 지향 목표로 하여 대학 1~2학년 대상의 정치학 교과서로 기획·집필된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또 책 제목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정치학연구에 필요불가결한 기초 정치이론을 다룬 「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권이 남·북한정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또다른 특징이다. 이는 기존 정치학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정치의 상대적 경시 경향을 교정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韓國的 政治學’의 필요성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다루는 한국정치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현실적 요구 내지 긴박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의 경우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작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자체 역량상의 문제들이 결합된 복합적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저자 1인의 저술이거나 공동저작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집필의뢰에 의한 단순한 공동저작에 그쳐온 경향이 있는 반면,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들을 동원하되 단순한 집필의뢰가 아니라 상당 기간의 共同研究를 통해 ‘관점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연구 결과물로서의 교과서 개발을 시도했다는 것이 또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이같은 대체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의 경우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증거들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서, 제 1부는 경제와 정치 간의 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도대·상부구조론, 현대정치의 주요 다이나믹인 계급운동과 국가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 2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원리를 흡스에서 루소로 이어지는 논쟁을 통해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정치사상의 현실적 전개인 19세기의 유럽 정치사를 자유주의 정치와 그 억압적 형태화인 보나파르티즘을 통해 20세기의 정치이론과 정치사를 독점자본주의 논쟁과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문제들을 통해 각각 분석해 내고 있다. 제 3부의 경우 우리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 3 세계 정치의 과학적 이

해를 돕기 위한 이론적 훈련을 위해 제국주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미국의 제3세계 외교정책 문제, 제3세계의 독재체제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설명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정치사」의 경우 단순한 연대기식의 서술적 정치사 연구를 넘어서 科學的 政治史 연구를 그 지향점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정치사 연구방법론은 역사학으로서의 정치사와 정치학으로서의 정치사를 변증법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시각에서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현대 한국정치사 연구에 관련된 시기 구분과 연구 관점의 문제를 소개하는 한편, 봉건체제기인 19세기 말부터 6공화국에 이르는 한국 현대정치사를 ① 자주적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민족운동(19세기 후반~1905), ② 식민지배 기구구축과 민족해방운동(1905~1931), ③ 식민지 파쇼체제와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발전(1931~1945), ④ 미군정기와 반제반봉건투쟁, ⑤ 분단과 조국통일운동, ⑥ 한국전쟁, ⑦ 전후 이승만독재의 구축과 몰락, ⑧ 4월 민중봉기와 민족자주화운동, ⑨ 군부독재의 구축과 민중운동의 성장, ⑩ 1980년대의 정치변동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교과서는 한국정치사를 構造·行爲의 辨證法에 주목하여 정치구조의 동학과 민중운동사적 전개 간의 맞물림을 추적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 한국정치를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한국정치론」의 경우 현대 한국정치 문제를 최근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어 온 國家論的 視角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우선 다원주의로부터 관료적 권위주의, 중속적 파시즘론 등 한국 국가성격 분석을 위해 제기된 이론들을 소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원론적 이론수준을 넘어서 한국의 국가문제를 국가기구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구의 일반이론적 문제로부터 의회 및 정당정치, 경찰 및 정보기구, 군, 경제적 국가기구와 경제정책,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와 지배이데올로기, 국가권력의 지배연합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같은 국가와 사회세력 간의 동학을 노동운동과 국가통제, 농촌지역 사회와 국가통제, 민족민주운동과 국가통제라는 시각에서 각각 분석하고 있다.

「북한정치론」의 경우 크게 北韓政治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문제를 다룬 1부와 북한정치사, 북한의 정치과정, 북한의 대외·통일 정책의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내용과 체계, 기능과 역할,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 간의 관계, 혁명 이론 등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제2부는 북한정치사를 항일 무장투쟁으로부터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사회주의 건설 이론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과정 분석은 수령론이라는 북한의 독특한 특성과 관련된 수령·당·대중관계, 노동당의 구조, 국가기구, 근로단체, 통일전선과 계급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통일·대외 정책은 북한의 대사회주의권, 대 제3세계권, 대 선진자본주의권 외교의 특징과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학강좌 시리즈 이외에도 한국정치연구회는 보다 본격적인 정치학 대체 교과서로서 「정치학개론」, 「민주주의론」, 「제3세계정치론」, 「정치학사전」 등을 기획한 바 있으나 현실적인 역량문제와 연구회의 활동을 ‘대중화를 겨냥한 연구성과의 外化’보다는 ‘연구의 질적 심화를 위한 內質化’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향전환 등과 관련하여 일부 기획은 구상단계에서, 일부는 구체적인 집필단계에서 중단된 채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그 비중이 훨씬 크고 포괄적이며 ‘기초과학적’ 성격이 강한 원론적 수준의 교과서 작업은 일단 제동이 걸려 있는 반면, 정치학강좌 시리즈에서 보다 구체적 수준의 학문적 성격이 강한 좁은 분야에서의 대체 교과서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제3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현대 권위주의체제의 성격을 둘러싼 라틴아메리카의 논쟁을 편역의 형식으로 소개한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 분과의 「반파시즘민주혁명론」과 한국전쟁 발발 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의 원인으로부터 전개과정, 영향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에 관한 총체적 再評價를 시도한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 분과의 「한국전쟁의 이해」 등이 있다. 이미 출판된 책 이외에도 당

초 집필 형식으로 기획된 「민주주의론」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양한 외국문헌들을 골라 번역하고 이에 체제와 쟁점별 집필을 추가시키는 절충 형식으로 바뀌어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상분과에 의해 현재 번역과 집필이 거의 끝난 상태에 있다.

대체 교과서 개발은 이같은 연구회 수준의 공동연구 이외에도 진보적인 중견·소장학자들의 개인적 수준에서도 編譯나 共同執筆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한국 정치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최장집 교수가 편지한 「한국현대사」, 「한국전쟁연구」, 이수인 교수가 편지한 「한국현대정치사 I」 등을 들 수 있다. 필자 자신 역시 한국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고학년 내지 대학원생용의 포괄적인 정치학 일반 대체 교과서로서 국가론, 한국정치, 현대세계체제(특히 제3세계와 사회주의)의 쟁점들을 다룬 「한국정치학의 새구상」을 최근 출판한 바 있다. 이밖에 정치학에 국한된 것이라고 분류하기보다는 총체적인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해방 8년사(1945~1953)를 다룬 「해방전후사의 인식」(6권 시리즈) 역시 중요한 정치학 대체 교과서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영순·이영우가 지은 「국가이론」 등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소장 연구자들의 교과서용 저술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에 소개한 지금까지의 대체 교과서 개발작업에서 몇 가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첫째로 視角의 多元化를 통해 경쟁을 통한 한국 정치학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로 나아가 지금까지 보수적이고 비자주적인 미국의존 일변도의 정치학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민족적·민주적·민중적인 ‘새로운 정치학’의 수립을 향한 중요한 첫 결음이다. 셋째로 개인연구자 중심의 수공업적인 연구를 넘어서 共同研究를 통한 집단적 결과물로서 교과서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대체 교과서 개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켜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중 중요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금까지의 정치학 대체 교과서 개발

이 포괄적·총체적이지 못하고 부분적·분절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간의 대체 교과서는 한국정치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채 ‘정치학개론’, ‘정치이론’, ‘국가론’, ‘정치사상사’, ‘국제관계론’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큰 基礎科學 수준의 대체 교과서 개발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는 현실의 한계이다. 특히 이같은 대체 교과서 개발은 궁극적으로 위에서 본 대체 교과과정 개발을 전체로 한 有機的 聯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교과과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가능한 것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便宜主義的 方式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로 그간의 대체 교과서는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대체 교과서가 아니라 기존 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한 補完(complimentary) 教科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중견의 교과서들이 주로 보수적 시각만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반쪽 교과서’였다면, 대체 교과서는 이에 대한 反作用으로 반대쪽으로 곱혀진 것을 펴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진보적 시각만을 주로 소개하는 또 다른 ‘반쪽 교과서’가 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동일 주제에 관한 교과서를 기존 교과서와 대체 교과서의 두 종류를 채택해야 均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강의 교수의 선호에 따라 이종 어느 한쪽만을 채택하여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문맹’이 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물론 사회과학에 있어서 엄격한 의미의 ‘가치중립적’ 사회과학이란 존재할 수 없듯이 ‘가치중립적’ 사회과학 교과서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대체 교과서가 진정한 의미의 대체 교과서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점(민족적·민주적·민중적인 관점)을 견지하되 進歩的 페러다임뿐만이 아니라 主流 이론까지도 그 이론의 합리적 핵심을 소화·소개하던 서 이에 대한 批判的 評價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자기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는데, 이점에서 기존의 대체 교과서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의 內實의 한계이다. 대체 교과서들은 대부분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공동연구의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집필자에 따라 각 소주제별로 觀點의 偏差가 상당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 책 전체를 꿰뚫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되어 온 정치

학 분야의 대체 교과과정 및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과 의의, 그 현황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정치학은 보다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한국적 정치학'의 발전을 위해 학술단체협의회 산하 연구회 수준을 넘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같은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 교과과정에 기초하여 새로운 한국적 정치학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노력이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